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3. 5.(수) 14:30 배포 2025. 3. 5.(수) 09:00

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

글로벌 최우수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지원한다

▸ 탑티어(Top-Tier) 비자, 청년드림 비자 등 외국 우수인재 유치 본격화
▸ 광역비자, 비자·체류정책 제안제 등을 통해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
▸ 이민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
▸ 국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

□ 정부는 3월 5일(수) 오후 2시, **최상목 권한대행 주재**로 정부서울청사에서 「**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**」를 개최*했습니다.

* **[참석자] (정부)** 권한대행(위원장), 산업·복지·고용·해수부 장관, 국조실장, 법무··외교·행안·국토·중기부 차관, 경찰·통계청 차장 등 참석, **(민간)** 이민정책 전문가 등 5명 참석

<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>

- **법적 근거 :**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8조
- **위원 구성 :** 위원장(국무총리), 정부위원(19명), 민간위원(9명) 등 총 29명
- **기 능 :**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·조정

○ 이번 회의에서는 「**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**」, 「**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**」, 「**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·도입 방안**」 등을 논의하였고, 「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」을 심의하였습니다.

□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

□ 정부는 **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**하기 위해 **비자제도를 개선**하고, **경제계·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**하는 **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**하기로 하였습니다.

【 ① 탑티어(Top-Tier) 비자 신설 】

○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, 3월 중 **탑티어 비자를 신설**하여 **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*** **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**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, 로봇, 방산 등

○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**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**를 취득하고, **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**로서, **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(약 1억 4천만 원) 이상의 보수**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입니다.

○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(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)은 **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(F-2) 비자를 곧바로 부여**받고, **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**할 수 있습니다.

○ 또한,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**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,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** 등 **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**하겠습니다.

○ 이와 더불어, **산업통상자원부의 '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(K-Tech Pass)*'과 연계**하여 **세제, 교육,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**을 통해 **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**을 만들겠습니다.

【*산업부 K-Tech Pass 지원사항】

□ **(지원사항)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(F-2) 발급** 및 각종 **정주지원**

- ▸ **(세제)** 최대 10년간 **근로소득세 50% 감면**(2월)
- ▸ **(교육)** 자녀의 **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** 허용(3월)
- ▸ **(주거)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**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(현행 2억원 → 개정 5억원)(6월)
- ▸ **(정착)** 금융·통신서비스 개설, 전입신고 등에 **전담기관 동행·안내 서비스** 제공(3월)

○ 아울러, **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,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(D-10)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** 허용하겠습니다.

【 ② 청년드림비자 신설 】

○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'코리안 드림'을 꿈꾸는 **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,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**하는 '**청년드림비자**(Youth's Dream in Korea)'를 신설하겠습니다.

○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하여, 청년드림비자는 **지방·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**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, 취업, 정착까지 **지자체·대학 등과 협력**하여 운영하겠습니다.

○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, **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,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**하거나 **본국으로 귀환**할 수 있도록 하여, **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** 또는 **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** 등 **선순환 구조**를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【 ③ 광역비자 시범 운영 】

○ 금년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,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·발급하는 '**광역 비자**'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.

○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, 광역비자는 **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**하여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입니다.

○ 금년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**유학(D-2) 비자와 특정 활동(E-7) 비자**를 대상으로 하며,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, '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.

* **(공모 결과)** 유학 비자는 10개 지자체, 특정활동 비자는 6개 지자체에서 신청

【 ④ 비자·체류정책 제안제 시행 】

○ 경제·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**'비자·체류정책 제안제'**를 시행하겠습니다.

비자·체류정책 제안제 개요

경제·산업계	→	소관부처·지자체	→	가칭 비자·체류정책 협의회*	→	법무부
비자·체류정책 관련 수요제기		(검토 후) 비자·체류 정책제안서 제출		민관심의기구 심사		제도개선 여부 최종결정

*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과 경제분야 등에 학식·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

○ 경제·산업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1차적으로 소관부처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쳐, 「가칭**비자·체류정책 협의회」에서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**하게 됩니다. 협의회에서는 **국가의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**를 포함하여, **국민경제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**, **불법체류 발생 가능성**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합니다.

○ 현재까지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서*가 접수되었고, **3월에 제1회 비자·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**하여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, **향후 반기 1회 협의회를 개최**하여 **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가 제때 해결**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.

* **(사례) 외국인 해기사(항해사, 기관사 등) 전문인력(E-5)** 자격 부여, **자동차 판금·도장 분야 특정활동(E-7)** 직종 신설 등

2.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

□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**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**시키기 위해 **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**하겠습니다.

○ 먼저,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**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* 이수를 장려**하고 **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**하겠습니다.

* 장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모국어(18개)로 대한민국의 기초법 질서,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

○ 조기적응프로그램에 **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**하여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범죄피해도 줄이겠습니다.

○ **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**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**현지**에서 **정착 지원 설명회**를 개최하고, 장기적으로는 **사회통합교육(조기적응·사회통합 프로그램*)을 현지에서 운영**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
* 합법체류 외국인,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귀화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·한국문화, 한국사회 이해를 함양하는 교육과정(384개 운영기관 지정)

○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* 등이 초·중·고교를 직접 찾아가서 **한국생활 적응,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·교육 등을 진행**하겠습니다.

*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 구성된 단체(21개국, 39명)

○ **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*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**

* 대학에서 정규(필수·교양) 과목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, 유학생이 해당 과목 이수 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○ 숙련기능인력(E-7-4)의 한국어 요건(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)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**'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'을 편성**하겠습니다.

○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**'동포체류지원센터'를 법제화**하여 우수 동포의 **유입-교육-취업-통합-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**하겠습니다.

3.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·도입 방안

□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**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**하면서 향후 **인력 부족*이 예상**되고 있습니다.

※ **(요양보호사 부족 규모**(현재 고용률 전제)) ('25) -3,762명 → ('26) -43,447명 → ('27) -79,020명 → ('28) -116,734명 (출처 : 건강보험연구원, 2023)

○ 정부는 작년 7월 요양보호사 비자(E-7-2)를 신설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하였으며,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습니다.

□ 이번 **“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·도입방안”**은 **기존 정책을 보완**하여 **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**하기 위해 **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**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

○ 먼저, ’26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**‘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’**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.

- **해외 국가자격*, 전공**,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**에 대해 **‘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’을 진행하고, 현장실습·자격취득·취업**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* **(예시)** 사회복지·간호 분야 등 관련 해외 공인자격증

** **(예시)** 사회복지학과, 간호학과 등 관련 전공 졸업·이수자

○ 또한,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**지역 우수대학을 ‘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’**으로 지정하고, **유학생 유치 → 학위과정 운영 → 자격취득 →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**하겠습니다.

□ 한편, 오늘 회의에서는 **「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2023~2027)의 2025년 시행계획」을 확정**하고, **21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5대* 분야 총 1,504개 세부과제를 추진**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① 경제, ② 안전, ③ 통합, ④ 인권, ⑤ 협력 및 인프라

□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**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**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[별첨 1] 외국인정책위원회 모두 발언

[별첨 2] 외국인정책위원회 안건 자료(요약본)

[별첨 3] K-Tech Pass 시행방안

< 총 괄 >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	이정환	(044-200-2089)
		담당자	서기관	김민경	(044-200-2090)
	법무부 외국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종철	(02-2110-4105)
		담당자	사무관	전강섭	(02-2110-4112)
	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	책임자	과 장	나윤정	(044-215-59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효진	(044-215-5911)

< 안건별 담당자 >

[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]

담당 부서 < 총괄 >	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박주현	(02-2110-4055)
		담당자	사무관	유수열	(02-2110-4059)

[K-Tech Pass 프로그램]

담당 부서	산업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	책임자	과 장	이용훈	(044-203-422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은	(044-203-4227)

[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 방안]

담당 부서	법무부 이민통합과	책임자	과 장	최문정	(02-2110-4140)
		담당자	사무관	주도현	(02-2110-4146)

[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·도입 방안]

담당 부서	법무부 출입국·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	책임자	과 장	김병철	(02-2110-4377)
		담당자	사무관	김명훈	(02-2110-4219)
	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	책임자	과 장	김도균	(044-202-3510)
		담당자	서기관	최종천	(044-202-3514)

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